

〈제 538호〉

-주간- **광주 경영계**

## 광주은행

### ◆ 어린이날 그림대회 성료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5일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약 1만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2019년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그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그림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 초등부 고학년으로 세 부문으로 진행되어 당일 발표한 주제로 어린이들이 그림 솜씨를 마음껏 발휘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특히 동물원에서 직접 동물을 찾는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받는 '동물 스탬프 투어'는 가족이 함께 참여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2019년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그림대회' 입상자는 오는 27일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6월 초 광주은행 본점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 기아차 광주공장

### ◆ 어버이날 '효 한마당' 행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은 지난 6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기아가족 부모님 초청 효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하신 1천여명의 광주공장 임직원 부모님께 그동안의 노고와 베풀어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노인과 부모 공경의 경로효친 미덕을

널리 알리고 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 보해양조

### ◆ 보해 복분자, 유럽·아시아 잇따라 진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의 복분자주가 전세계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수출을 확정했다.

지난 3월 '2019 몬터레이 국제 와인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보해 복분자주는 'Korea No.1 와인'으로 인지도를 높여가는 중으로 유럽에서 보해복분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업체들은 프랑스에 수출된 제품을 다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 국제 와인 대회에서의 타이틀을 가지고 주류시장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보해 복분자주는 독일, 영국 등 10여개 국가에 현재 수출 협의중에 있다.



## II. 광주경충 소식

### 〈1441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5월10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초청 <2019 전남 도정 방향>이란 주제로 제1441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전남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졌고 인구도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겨내 앞으로 새롭게 자랑스러운 천년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런 의지를 담아 민선7기 슬로건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으로, 도정목표를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올해 1/4분기 전남지역 주요 경제 지표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같은 성과는 전남 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지역 경영인 덕분"이라고 말했다.

예산도 당초 6조 예산이었는데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8천억이 증액되어 6조8천억으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도민의 숙원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장 관광산업벨트는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전남에서 경남,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첫 단추가 될 서남해안 관광도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포함되어 국도 77호선인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전남신안에서 여수까지 섬과 바다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2019년 전남도정 주요시책으로 혁신성장 산업육성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및 농축어가 소득향상을 통한 살고 싶은 농산어촌조성과 지역핵심 SOC 확충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및 맞춤형 복지 정책강화, 인재키우기사업 등을 소개하고 상생과 정제되지 않는 밑바닥 민심을 듣는 소풍으로 도민 제일주의 도정 실현 등에 힘쓰겠다고 소개했다.

### 사무국 일지 (5.7 ~ 5.10)

5.7 (화)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참석	5.9 (목)	● 전국경충 부회장단 회의 참석
5.8 (수)	● 증장년 제8회 생애설계교육 진행 ● 청년일경험드림 e-나라도움 교육 참석	5.10 (금)	● 제1441회 금요조찬포럼 ● 증장년 제2회 전직스쿨 프로그램 운영

## 1. 노사 동향

### ■ 경사노위는 5. 8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의결구조 개편과 향후 사회적 대화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 노사정은 「본위원회」의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4항에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

※ 위원회법 제7조 4항 :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 한편, 노사정은 「운영위원회」와 「의제·업종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로 결정

- 「운영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후속 논의를 5. 20까지 진행하는 한편, 「(가칭)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연금개혁특위」와 같은 「의제·업종별위원회」 활동도 지원한다는 방침

- 당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3개 합의안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기로 결정

※ 3개 합의안 :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 ■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현행 체제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 예정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최저임금위원회는 5. 8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일정,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 제고 방안 등에 관해 논의

- 최저임금 적용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한다는 방침

- 세부 추진일정은 5. 10 「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

○ 한편, 류장수 위원장은 5. 9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공익위원 7명과 함께 지난 3월 표명했던 집단사퇴 의사를 재확인

※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에 따른 새로운 위원 구성의 필요를 이유로 집단사퇴 의사 표명

#### ■ 고용부는 5. 7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 고용부는 유사·중복되는 일자리사업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 폐지 또는 사업 재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

- 또한 성과가 부진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 성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 일몰제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 및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 참고 1 ] 고용부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개선방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체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성과·유사·중복 사업 통·폐합(12개 사업중 4개 폐지, 6개는 3개로 통합)</li> <li>- 폐지 :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단체지원, 건설근로자 기능 향상·취업 지원 등 4개</li> <li>- 중복조정 : 고용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지원으로 통합</li> </ul>
성과중심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별 성과지표 + 집행률 → 성과등급 예산 반영</li> <li>▲일자리사업 유형별 핵심지표 설정·최소성과 기준 도입</li> <li>▲직접 일자리사업 일몰제 도입</li> <li>▲신규 직접 일자리사업 한시 사업으로 추진</li> </ul>

#### ■ 노동계는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

○ 한국노총은 정부 출범 1년차와 달리 노동정책에 대한 노력과 실천력이 떨어졌다고 평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목표 달성 실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 등에 대해 부정적 평가

- 한국노총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보장과 타임오프제 개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에 힘써줄 것을 요구

○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정책과제 이행 제자리걸음, ▲최저임금·근로시간 관련 노동정책 제도 개정 시도, ▲‘노동존중 사회’에 맞지 않는 소극적·보수적 노동행정으로 평가

- 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형태종사자 권리보장,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등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들에 대해 진척이 없고, 향후 계획도 경사노위로 떠넘겨져 있어 이행 여부가 불투명 하다고 주장

-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 법개정 시도를 비판하며 대선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공약에는 있었지만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등을 촉구

○ 노사는 5. 8 상견례에서 산별교섭 운영방식을 확정하고 산별교섭 요구안 공유

- 노조 요구안에는 임금 총액 대비 6% 인상안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포함

※ 요구안 주요 내용 :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장시간 근로 근절 등), 인권존중·안전한 병원 만들기(불법적 의료행위 근절 등), 임금인상 6%,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료민영화 중단 등

- 산별교섭은 매주 수요일 1회 진행될 예정이고 노조는 산별교섭 강화, 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4 ~ 5월 대정부 정책협의, 6. 13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

■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는 근로시간 단축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5. 15 파업 예고

○ 사는 지역별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합의에 실패한 자동차노련 소속 지역별 버스노조는 4. 29 각각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 노조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버스 업종이 제외됨에 따라 '19. 7. 1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 노조는 5. 8 ~ 10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조정 결렬 시 5. 15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



## 2. 판례 동향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회사가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만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37167, 2016다37174(병합) 판결).

### 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약 14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함.
-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2008년) 상 정기상여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참고 1 ]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에 관한 내용

- 1) 지급액 : 본 협약 제30조에 정한 통상임금의 600%를 해당금액으로 하되, 상여금 지급시(100% 지급기준) 통상임금에 각 100%를 가산한다.
- 2) 지급시기 :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에 각각 100%를 지급한다.
- 3) 지급대상
  - 재직자 : 입사 후 2개월 이상 근무자(지급일 기준) 100% 지급. 단, 입사 후 2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일수(날짜기준) 일할계산 지급
  - 휴직, 복직, 정직, 퇴직자 : 2개월 기준으로 근무일수(날짜기준) 일할계산 지급

-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해 1심(서울남부지법)은 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서울고등법원)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근로자들의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하급심에서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음.

#### [ 참고 1 ] 2심 재판부의 신의칙 위반 판단 근거

-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3년 기본급의 3.3% 인상에 합의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지급할 임금 총액은 10% 이상 증가하므로 당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상당히 상회함.
- ② 회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12년을 제외하고)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고, 그 규모 역시 점점 늘고 있음.  
※ 2010년 영업이익 -873억원, 2015년 영업이익 -1,011억원
- ③ 회사는 2011년 이후 상시적인 순환휴업 실시 중임.  
※ 2012년 전체 근로자 1,400명 중 600명 이상 휴업, 2014년 100명 이상 휴업

## 2. 판결요지

### (1)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증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증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회사는 B노조로부터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을 양보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B노조가 격려금 지급 사실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게 함으로써 개별 교섭 중인 A지부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따라서 회사가 B노조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A지부의 단체교섭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2)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발생 가능성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참고] 대법원의 판단 근거

- ① 근로자들의 제소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원 상당으로 보임. 이는 회사 연간 매출액의 약 0.1%에 불과하고,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약 1,500억원의 0.3%에 불과함.
- ②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성자산은 2015년 말 기준으로 800억원 상당이므로 새로이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의 약 160배에 이룸.
- ③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3. 시사점

- 대법원은 기존 법리를 토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신의칙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의칙 위배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 최근 2월에 있었던 통상임금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에 이어 다시 한번 신의칙 위배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엄격해진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끝.